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 국내·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 독일, '남녀 동일임금' 위한 법안 시행 2주년과 남은 과제<sup>1)</sup>

독일은 2008년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을 제정하고,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남녀임금격차의 감소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2017년 3월 '공정임금법(Entgelttransparenzgesetz)' - 모든 고용주는 남녀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하며 특히 200명 이상 규모의 고용주는 직원 개인 요구가 있을 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임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500명이 넘는 대기업 고용주는 회사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을 제정했으나,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동법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보다 엄격한 의무조항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스 뢉클러 재단(Hans-Böckler-Stiftung)의 경제사회연구원과 베를린 INES 연구소가 20개 이상 기업을 조사한 결과, 12%의 기업만이 적극적으로 이 법을 이행하고 있었다. 201~500명 규모의 중기업의 19%, 501명 이상의 대기업의 18%만이 남녀동일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직원이 근로자 대표협의회(Betriebsrat)를 통해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도 중기업 13%, 대기업 23%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공정임금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회사 급여 구조에 대한 심사 권고가 아니라 의무로 규정', '소규모 사업장 직원의 참여 높일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채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참고문헌 •

[https://www.boeckler.de/14\\_117892.htm](https://www.boeckler.de/14_117892.htm)

<https://www.equalpayday.de/kontakt>

[https://aktion.bvg.de/frauenticket?fbclid=IwAR0qt57aBuowv6\\_lmlftBk88IHQuqeXZm1PpwyxalGJvdqe00bBzWU0m0FA](https://aktion.bvg.de/frauenticket?fbclid=IwAR0qt57aBuowv6_lmlftBk88IHQuqeXZm1PpwyxalGJvdqe00bBzWU0m0FA)

## 독일, 여성 위생제품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 이어져<sup>2)</sup>

여성 위생용품에 부과되는 세율을 현행 19%에서 7%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의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 세율체제로 나뉘는데, 탐폰, 생리대 등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일반 세율인 19%로, 기본 식료품 및 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세율 7%보다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자는 움직임은 독일 내에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일었다. 지난해 이 이슈를 공론화한 사회민주당(SPD) 소속 난나 조세핀 롤로프는 여성 위생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줄이자는 당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여성 위생제품은 럭셔리 용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성별에 의한 경제적 차별이며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독일 매거진 ‘Neon and einhorn’를 중심으로 한 여러 페미니스트 그룹은 5월 말까지 독일 의회에서 여성 위생용품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19% 부가가치세를 7%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독일 여성 그룹들은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매달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런 제품에 지금처럼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독일 의회는 5월 28일까지 최소 5만 명이 청원서에 서명하면 부가가치세 인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문헌 •

Change(2019), “Die Periode ist kein Luxus – senken Sie die Tamponsteuer!”,

<https://www.change.org/p/die-periode-ist-kein-luxus-senken-sie-die-tampons-teuer-starkwatzing-er-bmfsfj> (검색일: 2019.5.12.)

Deutsche Welle(2019.3.5.) “German feminists call for end to ‘luxury tax’ for tampons”,

<https://www.dw.com/en/german-feminists-call-for-end-to-luxury-tax-for-tampons/a-48598893> (검색일: 2019.5.9.)

2) 작성: 채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영국,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공개정책의 문제점 과 BBC의 성별 불평등 임금 사례<sup>3)</sup>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영국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공개 정책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영국 정부는 2017년 직원 250명 이상 고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평등법 2010(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이 통과되었고 규정에 성별 임금 격차 보고(gender pay gap reporting) 의무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러나 자료 제출을 기업 재량에 맡기는 제도의 구멍 때문에 부정확한 수치가 넘쳐나고, 잘못된 수치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부족해 ‘엔터리 보고서’가 될 우려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공영방송 BBC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평등인권위원회가 3월 12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 노동당의 다운 버틀러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성별 임금 격차 보고는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기업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엔터리 보고서가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 참고문헌 •

The Guardian (2019.2.28.) “Lack of sanctions 'makes a mockery' of gender pay gap report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feb/28/lack-of-sanctions-makes-a-mockery-of-gender-pay-gap-reports> (검색일: 2019.3.20.)

The Guardian (2019.3.12.) “Equality commission to investigate BBC over pay discrimination”, <https://www.theguardian.com/media/2019/mar/12/equality-commission-investigate-bbc-gender-pay-gap> (검색일: 2019.3.20.)

## 영국, 치마 속 촬영하면 최대 2년형 징역 처하는 일명 ‘업스커팅 법’ 시행<sup>4)</sup>

영국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치마 속을 촬영(upskirting)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최대 2년 징역에 처하는 불법촬영 금지법(Voyeurism Offences Act 2019)이 4월 12일 시행됐다. 영국에서 ‘업스커팅’(Upskirting, 치마 속 촬영)으로 더 잘 알려진 불법 촬영은 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웠다. 하지만 2017년 여성

3) 작성: 황수영(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4) 작성: 황수영(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치마 속 촬영을 성범죄로 처벌해 달라”는 캠페인을 장기간 펼치면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피해 여성들의 활발한 캠페인이 불법촬영 금지법 입법을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7세 여성 지나 마틴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업스커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나는 “업스커팅을 성범죄로 만들어 달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고, 순식간에 5만 명이 청원에 참가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자유민주당 (The Liberal Democrats) 소속인 웨라 홉하우스 국회의원이 관심을 보이면서 입법에 탄력을 받았다. 영국의 아동 및 여성 인권 보호 비영리 단체인 ‘Plan International UK’의 대표 루시 러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길거리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피해여성들은 부끄러워서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이런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제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참고문헌 •

- GOV.UK (2019.4.12.) “Implementation of the Voyeurism (Offences) Act 201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plementation-of-the-voyeurism-offences-act-2019> (검색일: 2019.4.15.)
- Legislation.go.uk (2019) “Voyeurism (Offences) Act 201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9/2/contents/enacted> (검색일: 2019.4.15.)
- BBC (2019.4.12.) “Upskirting now a crime after woman's campaign”,  
<https://www.bbc.com/news/uk-47902522> (검색일: 2019.4.15.)

## 영국, ‘스토커’ 통제 및 처벌 강화한 스토킹 보호법 (Stalking Protection Act) 제정<sup>5)</sup>

영국에서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를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 스토킹 보호법(Stalking Protection Act)이 3월 15일 제정됐다. 과거에는 범죄 피해가 발생해야 경찰이 개입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서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경찰은 스토킹이 의심될 경우 스토킹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스토킹자에게 심리 상담과 범죄 예방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스토킹자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5년 형의 징역이나

5) 작성: 황수영(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16년 10월,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한 20대 여성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사망 당시 26세였던 앨리스 러글스는 이별 뒤에도 집요하게 그녀를 스토킹했던 전 남자친구인 트리만 딜런에게 잔인하게 살해됐고, 가해자는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18년 9월 보도를 통해 “앨리스가 살해되기 전에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 2명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며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내무성은 “가정 폭력법 초안은 전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등 아는 사람에게 스토킹 등 폭력을 당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낯선 사람에게 스토킹 피해를 보는 이들은 스토킹 보호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참고문헌 •

GOV.UK (2019.3.15.) “Government backed Stalking Protection Bill receives Royal Assent”,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backed-stalking-protection-bill-receives-royal-assent> (검색일: 2019.3.28.)

Parliament.uk (2019.3.15.) “Royal Assent: Stalking Protection Bill signed into law”,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9/march/royal-assent-stalking-protection-bill-signed-into-law/>(검색일: 2019.3.28.)

## 영국, 생리 기간 여성 수감자에게 생리대 지급 의무화<sup>6)</sup>

영국 정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이 생리 기간일 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생리 중인 여성 수감자에게 경찰이 생리용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일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인권 단체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영국 내무성은 “구치소에 있는 여성들이 생리 기간에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여성 수감자에게 생리용품이 필요한지 먼저 물은 뒤 수감자가 요청할 경우 생리대나 탐폰 등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 수감자가 생리를 비롯해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요구를 할 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 교도관에게 따로 상담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다. 내무성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케이트 캠페인 ICVA 대표는 “앞으로 여성 수감자들이 생리 기간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생리용품을 제공받아 교정시설에서 존엄성이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6) 작성: 황수영(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 참고문헌 •

<https://www.theguardian.com/law/2018/jan/04/ignoring-womens-needs-in-custody-breaches-their-rights-says-watchdog>〈접속 일자: 2019년 4월 30일〉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prison-women/uk-to-provide-all-female-prisoners-with-free-sanitary-products-idUSKCN1S025A>〈접속 일자: 2019.4.30.〉

## 미국, 식품의약국(FDA) 산후우울증 치료제 승인<sup>7)</sup>

2019년 3월 19일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산후 우울증제 치료제를 최초로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산후우울증 치료제인 세이지 테라퓨틱스(Sage Therapeutics)의 줄레소(Zulresso, 성분명 brexanolone)는 여타의 우울증 치료제와는 달리 산후우울증에 특화된 약물로서, 치료 과정에서 사용될 경우 의사의 감독 아래 60시간 동안의 투약을 거치면 길어도 한 달 내에 효능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약 미화 2만 불에서 3만 5천불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후 우울증(Postpartum Depression, PPD)은 임신 중 혹은 분만 후 발병하며 죄책감, 무기력함과 공허함, 초조함,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미국에서는 매년 40만 명의 여성이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미의 전문가들은 산후우울증에 특화된 약물을 승인한 것은 그간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해왔던 여성의 질병인 산후우울증에 대한 인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번 FDA승인을 환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The Star(2019.3.19.), "FDA approves first drug specifically for postpartum depression", <https://www.thestar.com/news/world/us/2019/03/19/fda-approves-first-drug-specifically-for-postpartum-depression.html> (검색일: 2019.3.22.)  
 HuffPost(2017.4.5.), "Canada Needs To Prioritize A National Postpartum Depression Strategy", [https://www.huffingtonpost.ca/patricia-tomasi/canada-postpartum-depression\\_b\\_9593834.html](https://www.huffingtonpost.ca/patricia-tomasi/canada-postpartum-depression_b_9593834.html) (검색일: 2019.3.22.)

7) 작성: 김양숙(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캐나다, 성평등 관점에서 공공 여성노동자에 생리용품 무료 지급 공론화<sup>8)</sup>

캐나다 연방정부는 5월 3일 정부 관보(Canada Gazette)를 통해 연방 노동법의 규율을 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탐폰과 패드 등의 생리용품을 무료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서 정부는 현 연방 노동법은 고용주로 하여금 일터의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온수, 손을 씻은 후 젖은 손을 말릴 수단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생리용품을 비치하라는 규정은 없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은 생리용품을 스스로 준비하여 직장에 가지고 와야 하는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언론 브리프에서 트뤼도 수상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평등의 질문”을 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가족부장관은 이 조치가 ‘정부가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생리용품까지 보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앞장서 본보기를 세우는데 의의를 뒤야 한다’면서, ‘이제는 어떠한 물품과 서비스가 필수적인 것인지를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생리용품을 물과 화장지 같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인식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실행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기차나 비행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승객들과 화장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이 어려울 수 있고, 트럭 운전자처럼 근로자가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60일 내에 정부가 해당 계획의 구체적 실행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어떤 용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참고문헌 •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2019.3.4.), “Notice to interested parties — Proposed amendments to certain regulations made under Part II of the Canada Labour Code to require the provision of free menstrual products in the workplace”,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3, Number 18, <http://gazette.gc.ca/rp-pr/p1/2019/2019-05-04/html/notice-avis-eng.html> (검색일: 2019.5.21.)
- Huffpost (2019.5.3.), “Canadian Government Wants To Make Menstrual Products Free For Federal Workers”, [https://www.huffingtonpost.ca/2019/05/03/canada-menstrual-products-government\\_a\\_23721476/](https://www.huffingtonpost.ca/2019/05/03/canada-menstrual-products-government_a_23721476/) (검색일 : 2019.5.21.)

8) 작성: 김양숙(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스웨덴 성(Sex) 및 성평등(Gender Equity) 교육 웹사이트 'Youmo' 개설<sup>9)</sup>

2015년 12월 31일, 독일 쾰른 철도역 광장에서 약 1천 여 명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약 5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며칠 후 용의자 19명이 특정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10명은 망명 신청자들이었고, 9명은 2015년 9월 이후 독일에 입국한 외국인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의 성평등(Gender Equity) 교육이 큰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이민 청소년<sup>\*</sup>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웹사이트(<https://www.youmo.se>, 이하 youmo)를 개설함으로써 이민, 난민을 위한 성 및 성평등 교육을 시작했다. 유모(Youmo)<sup>\*\*</sup>는 이민 청소년 13세에서 20세를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건강한 성 생활, 피임, 임신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매매, 인간관계, 스웨덴에서 친구 사귀기, 결혼, 동거, 가족형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 웹사이트는 스웨덴어, 영어, 아랍어, 다리어, 소말리어, 티그리냐어 등 6개 국어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개설된 이래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유모가 개설된 후 막대한 세금을 들여야 할 정책이 아니라고 비난했고, 또한 유모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이민 남성으로 하여금 현지 여성과 관계를 맺으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모 웹사이트를 이용한 이민 청소년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고,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 참고문헌 •

<https://www.dn.se/> (검색일: 2019.3.20.)

<https://www.svd.se/ensamkommande-bor-fa-sexualundervisning/om/overgreppen-under-we-are-sthlm> (검색일: 2019.3.21.)

<https://www.thelocal.de/20160108/po> (검색일: 2019.3.16.)

The Local(2019.3.28.), "Huge international interest in Sweden's sex education website", <https://www.thelocal.se/20190328/huge-international-interest-in-swedens-sex-education-website> (검색일: 2019.3.22.)

9) 작성 : 홍희정(움살라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 인식이 낮은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음

\*\*기존 스웨덴 청소년 클리닉으로 불리는 UMO(Youth Reception on the Net)의 자회사 임.

## 이탈리아, 국영방송사의 성별 분리 채널 운영계획에 사회적 논란 확산<sup>10)</sup>

최근 이탈리아 국영방송사 Rai는 운영 전략 개편의 일환으로 남녀의 다른 선호를 반영한 분리된 TV 채널(남성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영하는 채널,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영하는 채널로 특화)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채널 Rai Movie, Rai Premium을 통합하여 남성 시청자들을 공략하는 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영하는 채널로 변경하고, 곧 이어 여성 시청자 대상 채널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방송사 측은 현재 두 채널로 연간 약 3천만유로에 이르는 광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시청자 수가 적어 이와 같은 변경(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계획안에 대해 Rai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성별로 차별하고 분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남녀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성별 수요를 보다 적절하게 겨냥하고 그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들로부터 큰 비난을 샀다. 의회 내 방송사심의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Democratic Party) 소속 살바토르 마르지오타(Salvatore Margiotta) 상원의원은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오늘날, 국영방송사에서 여성 시청자, 남성 시청자를 나눠 다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RAI 언론인 노동조합인 Trade Union of RAI Journalists (USIGRAI) 역시 ‘특정 시청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성별을 기반으로 한 채널 분리 및 운영은 용납하기 어려운 계획이며, 각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유명 배우 및 여성 단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nonchiudeteraimovie (Don't Close Rai Movie)라는 해쉬태그를 달면서 이번 Rai 방송사의 개편안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방송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서의 남녀시청자 수요 반영 및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The Guardian (2019.4.19.), “Italian broadcaster’s plans for gender-based channels spark fury”,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19/italian-broadcasters-plans-for-gender-based-channels-spark-fury> (검색일: 2019.5.10.)

The Telegraph (2019.4.19.), “Italy’s public broadcaster under fire for separate channels for men and women”, <https://www.telegraph.co.uk/news/2019/04/19/italys-public-broadcaster-fire-separate-channels-men-women/> (검색일: 2019.5.10.)

10) 작성: 곽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스페인, 2019년 총선에 여성의원 비율 47.4%로 역대 최고치 기록<sup>11)</sup>

스페인은 지난 4월 28일 조기총선을 개최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의 여성의원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비율은 47.4%로, 총 350석 중 여성의원이 166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각 정당 후보명단에서 이미 여성후보 비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2007년 양성평등법을 제정했으며, 본 법에서 선거 후보명단 작성 시 어느 특정성별 비율이 60%를 넘거나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회 내 남녀 비율에서의 평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은 47%가 넘는 비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평균 의회 내 여성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반면 이번 의회를 구성한 모든 정당들의 대표가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 3월 여성의 날을 기념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유럽 내 정치 영역에서 성 불평등이 아직 만연하고 정당 대표, 장관 등과 같은 주요 보직에는 남성들이 대부분 임명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정부 내 장관급 보직을 맡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2019년 현재 평균 30.5% 수준이다. 이 부분은 스페인 역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El Pais (2019.5.22.), "The day that women took over Spanish Congress," 2019년 5월 22일자, [https://elpais.com/elpais/2019/05/22/inenglish/1558517200\\_573782.html](https://elpais.com/elpais/2019/05/22/inenglish/1558517200_573782.html) (검색일: 2019.5.22.)

Euronews (2019.5.1.), "Which countries in Europe have the highest proportion of women in parliament?", <https://www.euronews.com/2019/05/01/which-countries-in-europe-have-the-highest-proportion-of-women> (검색일: 2019.5.22.)

## OECD, 2019년 '사회제도 및 젠더지수(SIGI)' 결과보고서 발표<sup>12)</sup>

OECD는 지난 3월 초 국가별로 성장별적 제도 및 관행을 측정한 '2019년 사회제도 및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SIGI

11) 작성 : 객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선거직후-5월초에 이르는 기간 대부분의 미디어 보도에서는 당선된 여성의원이 총 164명이라고 명시했으나, 가장 최근 시점(5월 22일) 보도이자 실제 의회가 개원하고 보도된 스페인 내 가장 유력한 일간지들 중 하나인 El Pais에서 166명이라고 명시한 것을 따름.

12) 작성 : 객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는 2009년 처음 시작되어 2012년, 2014년, 그리고 올해 네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4분야, 총 16개의 세부지표로 나뉘어 국가별 성불평등 및 성차별 정도를 측정한다. 스위스가 120개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했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포르투갈이 그 뒤를 이었고, 상위 10위권은 모두 유럽지역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총 점수 23.40%로 51위를 기록해 카테고리 상으로는 ‘낮음(low)’으로 분류되었다. 보고서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현재의 양성평등 실현 진행 속도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5번인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권익강화’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최소 2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Reuters (2019.3.8.), “Switzerland ranked as best country for women’s rights: OECD,” <https://www.reuters.com/article/us-global-women-discrimination/switzerland-ranked-as-best-country-for-womens-rights-oecd-idUSKCN1QP239> (검색일: 2019.4.7.)  
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https://www.genderindex.org/ranking/> (검색일: 2019.4.7.)

## 국제 앰네스티, 덴마크의 성폭행 법적 정의 및 인식 문제점 지적<sup>13)</sup>

덴마크는 양성평등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되는 국가 중 하나이나 이번 달 초,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덴마크 사회에 아직 성폭행 문제가 만연하고 특히 법적 정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덴마크 형법 상 성폭행 정의가 피해자의 신체적 저항 및 폭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동의 여부에 근간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덴마크 형법(Criminal Code)에서는 성폭행은 신체적 폭력이나 폭력 위협, 압력, 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덴마크 여성인권단체인 Danish Women’s Society 부대표 헬레나 글리스보르 한센(Helena Gleesborg Hansen)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이러한 법적 정의와 시행체계는 가해자의 범법 행위 자체보다도 피해자가 성폭행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법에서는 ‘싫다’라고 하며 저항하기 전에는 마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처럼 프레임이 짜여있는데, 그게 “아니다. ‘좋다’라고 승낙하기

13) 작성: 곽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전에는 그 누구도 몸에 손대서는 안 되는 것으로 법적 정의의 기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식 접수된 피해 건수가 890여건에 그친다는 점은 피해를 입은 후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제도적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신고 및 수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법적 정의가 적용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성폭행 피해자를 고려하고 보호하는 방향인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Amnesty International (2019.3.5.), “Give us respect and justice!: Overcoming barriers to justice for women rape survivors in Denmark”,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eur18/9784/2019/en/> (검색일: 2019.3.22.)

BBC (2019.3.11.), “Does Denmark have a ‘pervasive’ rape problem?,”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7470353> (검색일: 2019.3.22.)



## [헌법재판소]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19.04.11]

#### • 참고문헌 •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pressrelease/selectPressrelease.do#>

- 여성가족부 등은 정부합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1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05](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05)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꾸어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힘[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4.1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015>

## [여성가족부]

### 스쿨미투 근절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실시

여성가족부는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등 학교미투)와 관련하여,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인 각급학교 4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운영 관련 현장점검 실시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5.1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5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57)

### 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2016년 2,884명보다 311명(10.8%) 늘어난 3,195명이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을 촬영한 범죄는 두 배 이상 증가('16년 61건에서 '17년 139건으로 127.9% 증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4.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19](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19)

### 개방된 '열린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단속한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열린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 실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3.2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83](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83)

## 2019 청소년통계 발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인구·건강, 학습·교육, 여가·경제활동, 안전·행동, 사회참여·의식 등을 다룬 「2019 청소년 통계」 발표

- 청소년의 96.2%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 2017년 청소년 절반 이상이 인권존중과 다양성 인정에 긍정적으로 인식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33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338)

##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전수조사 등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02.]

###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287](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287)

##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개설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개설·운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08.]

### • 참고문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38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38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서비스 품질관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 안·적성 검사 도입 등을 통한 채용 단계 검증 강화
- 현장 실습 확대 등 현장 사례 중심의 소규모 교육 실시
- 아이돌보미 활동내역, 이력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모 공개
- CCTV 등 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
-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처분 5~20년으로 강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26](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26)

### 다문화수용도 ‘청소년 높아지고 성인은 다소 낮아져’

여성가족부는 일반국민(성인)과 청소년 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 발표

- (수용성 지수) 청소년은 높아지고('15년 67.63점 → '18년 71.22점), 성인은 다소 낮아짐('15년 53.95점 → '18년 52.81점)
- (세부 집단별) 연령이 낮을수록(20대 55.61점 > 30대 55.07점 > 40대 53.74점 > 50대 51.49점 > 60세 이상 48.20점) 수용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일반국민(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졌으나, 단일민족지향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이주민과의 관계) 이주민과 가족, 친구, 선생님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수용도가 높으며, 그들 중 '이웃관계에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용도가 낮음
- (다문화교육·활동 참여) 교육 및 활동 경험자들의 수용성(청소년 참여자 72.55점, 미참여자 70.58점 / 성인 참여자 57.70점, 미참여자 52.57점)수준이 높음.[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1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1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11)

### 2018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 발표

-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중 10년 이상 한국 거주자가 2009년 15.6%에서 지난해 60.6%로 크게 증가해 장기 정착 경향 뚜렷

- 장기 거주로 한국 생활 적응력은 높아졌지만, '도움·의논 상대가 없다'는 비율은 늘어나는 등 사회관계망 부족
- 심화자녀 또한 학령기 비율이 증가하여 청소년기 자녀 양육의 중요성 증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4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42)

##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반 특성) 평균연령 43.1세,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77.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 (소득) 월평균소득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
- (경제활동) 한부모 84.2%는 취업 중,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등 고용안정성 다소 개선
- (주거) 전·월세 비율은 줄고 공공임대 입주자는 늘어남.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향상됨
- (자녀양육) 초·중·고등학생 자녀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비율이 높아짐(47%→53.9%)
- (정부정책)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2년 30.4% → '15년 41.5% → '18년 46.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 영향으로 보임
-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
-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1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02](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02)

##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발표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인「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 조사」결과 발표

- 2015년에 비해 가족친화지수 4.5점 상승(공공>민간 / 인증>미인증)
- 기업의 재무성과, 근로자의 직장만족도와 가족친화지수는 정(+)의 관계
- 24일 「가족친화경영 실천 포럼」,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잇따라 개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2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18](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18)

## [보건복지부]

###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 중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총 34만 649개)의 운영·취업자와 함께 2018년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발표

- 적발유형별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
- 적발된 21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명령 조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4.23.]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9166](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49166)

###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지급 받아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개정 '19.1월, 시행 '19.4월)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목) 첫 보편 아동수당 지급

- 4월 22일 기준 232만 7000여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신청, 이 중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4.25.]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217](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217)

## [고용노동부]

###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등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 첫 번째 발표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 발표

-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05.16.]

####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15](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15)

## [법무부]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현행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사회구조 및 국민인식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예정[법무부 보도자료, 2019.04.30.]

#### • 참고문헌 •

[http://www.moj.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182&fn=temp\\_1556613690412100](http://www.moj.go.kr/viewer/skin/doc.html?rs=/viewer/result/bbs/182&fn=temp_1556613690412100)

## [국가인권위원회]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간 임금격차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4.20.]

#### • 참고문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035>